

“여순사건 ‘공소기각’ 절대 안돼”

여순사건재심대책위, 군법회의 명령서·미군 기록 공개 대책위, 제주 4·3희생자 재심처럼 ‘공소기각’ 절대 안돼

여순사건 당시 사법작용을 가장 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록들이 법원의 ‘여순사건재심’을 앞두고 출품이 공개되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갖고 당시 재판이 존재했던 점을 알 수 있는 명령서와 이를 기사화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공개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기록을 발굴해 재판전 미리 공개하는 것은 ‘판결서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라는 식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병섭(향토사 연구가) 재심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주철희(여순항쟁 연구가)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9차례의 군법 회의와 이를 기록한 신문기록, 미국 국방부 문서, 사형인수원 기록한 미군 자료, 판결 명령서인 명령 3호와 명령 5호 존재, 외신기자의 보도사진과 사진 설명의 일치 여부, 외신기자의 회고록 등 기록들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은 4차 군법회의 판결연도까지 언론에 보도됐으나 이후 9차 군법회의까지 보도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계엄령에 의한 언론통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주철희 위원장은 “명령 3호, 명령 5호만 보더라도 재판이 있었던 사실이 설명되고, 희생자가 범죄사실과 죄과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로도 재판의 근거가 된다”면서 “사법절차의 오류나 판결서의 보관 등 모든 사법적 작용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아닌 올바른 재심재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필 재심대책위 집행위원은 “제주 4·3재심처럼 여순사건 재심도 근거자료가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되지 않도록 70여년 전 군사재판 기록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으며 정부 참고, 미군 자료, 언론보도 등 자료를 정부 참고 등지에서 찾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은 실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와 민간인 체포·구금이 절차법에 따라 정당했는지 여부 등인데 사실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 4·3 재심 재판의 경우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거

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이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재심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목을 매고 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공소기각’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거 및 자료 수집에 모든 것을 걸고 국방부 자료실과 미군 자료까지 훑고 있다.

한편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재심재판이 열린다. 재심대책위원회는 재판전 발굴하거나 수집한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자위대 해외진출 용납할 수 없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일본의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규탄 기자회견’에서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들이 손파켓을 들고 있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은 의문’ 광주시 각종 위원회 남발

광주시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8년 광주시 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88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으로 예산 12억4095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참석수당을 집행한 금액은 전체의 55.9%인 6억9428만원이고, 나머지 44.1%인 5억4622만원은 불용처리했다.

불용액이 과다한 원인은 광주시의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저조한 때문

이다. 지난해 188개 위원회 중 1년 동안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전체의 27.7%인 52개에 달했고, 6개 위원회는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한 횟수는 24회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평생교육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평생교육협의회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단 한 차례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특정 현안이나 조례에 근거해 구성한 위원회가 남발되면서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위는 “각종 위원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위원회 예산 편성시 전년도 운영실적에 따라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술취한 남편 50대 아내 수차례 폭행해 사망

고흥경찰서는 50대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6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일 오전 4시께 고흥군 금산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8) 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 폭행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알렸으며, 주민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 B 씨를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5시 57분께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판명 됐다.

경찰은 술을 마신 A 씨가 가정불화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흥=한용섭 기자

신변 비관해 바다 뛰어들 40대 여성 구조

한밤 중 신변을 비관해 바다로 뛰어들 40대 여성을 해경이 구조했다. 11일 오후 11시42분께 목포시 북항 여객선선착장 인근에서 김모(45·여)씨가 추락했다.

민취한 김씨는 신변을 비관해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목포해경 북항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팀을 현장으로 급파해 바다에 빠져 안벽 가까이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해경에 구조된 김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조작 증거 재판부 제출 변호사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12일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조작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뢰인인 B(54)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다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서 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 4명 검거

인천 남동구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행위예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리자 A(37)씨와 성매매 여성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아파트서 10대가 옷장에 불질러 6명 부상

12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 163.43㎡와 내부 집기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554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주민을 구조하던 소방대원 1명이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불이 난 집에 사는 A(19)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옷장에 불을 질렀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